

10차시 [피해자의 친척이 자치위원회의에 있는 경우, 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

#### <학습목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에서의 분쟁조정절차 및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 중 분쟁조정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며, 분쟁 조정의 절차 및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경우 및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와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처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치위원이 제척, 기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본다.

#### <사례>

##### 사건의 개요

P시 소재 J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A는 점심시간 때 같은 반 친구인 학생 B가 평소 자신이 호감을 갖고 있는 같은 반 여학생 C에게 장난을 치는 모습에 화가 나서, A는 B에게 “C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 친구다. 함부로 말을 걸지 말라.” 고 하였다. 이에 B는 A에게 “네가 뭘데 나한테 명령을 하느냐?” 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격분한 A는 B에게 주먹으로 4-5회 가랑 얼굴을 가격하였고, B가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숙이자 무릎으로 2-3회 B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A의 폭행으로 B는 앞니 3개, 윗니2개가 파절되고 신경이 손상되어 앞니의 색이 누렇게 변색되고,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위 사건이 발생하자 B의 담임선생님인 T는 B의 부모님에게 전화로 연락하였고, B의 아버지인 F는 즉시 학교로 달려와서 B의 상태를 보고 화가 나서 가해학생인 A에게 사실확인을 하겠다며 교실로 들어가 A를 보고 “어떻게 된 일이야? 네가 우리아이를 때린 것이 사실이야?” 고 물었으나 A가 “B가 맞을 짓을 했다.” 고 말하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A의 뺨을 때린다는 것이 A의 코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하게 되었다.

위 사건으로 J고등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A학생에게는 사회봉사 5일 및 특별교육이수 5일의 조치가 내려졌다. 치료비에 대한 합의 조정을 위하여 피해를 입은 B의 부모는 분쟁조정 신청을 하였고 A의 부모에게 치아 3개의 치료비를 약 2,000만원을 요구하였다. 분쟁조정이 개시된 후

10일이 지나고 분쟁조정이 지지부진하자 A의 부모는 자치위원회의 조치가 가해학생에 대해서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고, 가해학생을 상해죄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한편 A의 아버지 G도 B의 아버지가 A를 고소하자 A를 검찰에 고소하였다. 한편 자치위원 중 L위원은 A의 작은 아버지였다.

J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A와 B의 치료비에 대한 분쟁조정을 계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가? 위 분쟁조정이 2011. 9. 6. 개시되었다면,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은 언제까지 가능한가?

자치위원 중 A의 작은 아버지 L은 위 분쟁조정에 계속 참여하여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가?

### 사건의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어떤 경우에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자치위원이 제척, 기피, 회피사유 및 분쟁조정기간이 1개월을 넘지 못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 사건의 결말

J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A의 아버지 F가 치료비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한것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이므로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의 대상이 된다.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 건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즉 반드시 거부하거나 중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례의 경우에는 분쟁조정이 개시된 이후 B의 아버지가 A를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계속할 수도 있고 중지할 수도 있다. A의 아버지 M이 B의 아버지 F를 고소한 것은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사유가 아니다. 다만 B의 아버지가 자신이 고소당한 것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거부’ 한 경우에는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분쟁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므로 위 분쟁조정이 2011. 9. 6. 개시되

었다면,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은 2011. 10.5.까지 종료돼야 한다.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해당 분쟁조정사건에서 제척되므로 자치위원 중 A의 작은 아버지 L은 위 분쟁조정에서 제척되므로 분쟁조정에 참여하여 심의하거나 의결할 수 없다.

## 전문가 의견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1개월이란 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개별법률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계산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이 적용된다. 1개월 이내 (또는 1개월을 넘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 9월 5일 분쟁조정을 개시하였다면 10월 4일까지(10월 4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해·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일 경우에는 해당학교 자치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한다. 피해·가해학생이 다른 학교일 경우에는 (1)동일한 시도 관할 구역일 경우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이 분쟁조정을 하고, (2) 관할구역이 다른 시도일 경우에는 각 지역의 교육감 간에 협의를 거쳐 분쟁조정을 한다. 조사권한은 자치위원회에 있으나 사실상 직접적인 조사는 자치위원회의 지시 하에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교사 즉,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 1. 분쟁조정이란? - 동영상 강의

가.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제도적 의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즉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과 분쟁조정’ 및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분쟁조정이란 소송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중립적인 제3자의 주선하에 분쟁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타협과정을 통해 화해에 이르는 제도를 말한다. 분쟁조정은 소송과 비교하여 절차의 진행이 신속하고 간단하여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경제적이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장점이 있

다.

#### 나. 중재제도

중재(Arbitration)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 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 법정제도이다.

나. 장점 : 분쟁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일도양단적인 판정보다는 당사자간 감정대립을 남기지 않는 장점이 있다.

#### 다. 중재절차에 의해 성립된 화해제약의 효력 및 집행력 확보 방법

중재절차에서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사법상 합의’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합의내용은 공정증서를 이용하면 집행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

#### 라. 피해·가해자 측 욕구

피해·가해자 측 욕구는 (1) 치료비 · 합의금이 모두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피해자 측은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각서가 두 번째이나 가해자 측과 학교 측은 기타의 욕구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결과는 피해자 측은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약속에 대한 의미가 사건 해결의 중요한 의미가 되고 있다.

(2) 가해자 측이나 학교 측은 자신들에게 더 중요한 다양한 기타의 요인으로 가해자 측은 형사고소취하, 사건일부부인, 사실수용거부, 사건의 객관적 조사 등의 억울함이 욕구로 나타나고 있다.

(3) 중재내담자욕구를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결정적인 욕구로는 치료비 및 합의금,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그리고 기타의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재내담자들의 욕구와 신청사유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비슷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가해 측 모두 치료비 및 합의금 조율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보아 현실적인 부분의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학교 측 욕구는 학교 측의 기타의 요인들로 학교폭력 문제해결의 어려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전문기관자문, 학교조정의 어려움 해소, 법적절차나 교육적 해결 등으로 학교 측의 한계를 드러내는 측면에서의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마.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할 사항

(1) 현재 법정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뿐만 아니라 분쟁해결도 담당하는 기능이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 의료전문가, 심리치료전문가 등이 자치위원으로 참여하여 법적, 의료적, 학생의 학교폭력 후유증, 가해학생의 심리치료 등에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분쟁해결을 주도한다면 모든 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인한 분쟁을 초기에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를 위해서는 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가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② 학교측은 학교폭력사건을 숨기지 말고 자치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며, ③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자치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의 장단점을 설명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④ 합의내용은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는 방법 모색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⑤ 분쟁해결 시 민·형사상 이의제기 금지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며, ⑥ 분쟁해결 후 피해자 및 가해자를 치료 및 교육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과 연계시켜야 하며, ⑦ 자치위원회에서 합의 후 일정기간동안은 합의 사항을 이행 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 2. 어떤 경우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 - 동영상 강의

가.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경우 즉, 피해학생 측에서 자치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나.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나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를 하고자 할 때 즉, 피해학생 측에서 치료비와 요양비 등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및 가해학생 측에서 피해학생 측의 치료비 및 요양비 에 대해 합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3. 분쟁조정의 신청권자와 기한 및 관할권

### 1) 신청권자

분쟁당사자(피해·가해측)만이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분쟁조정신청서(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를 기재함)를 작성 하여 자치위원회나 교육감에게 신청한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서면신청 없이도 개시될 수 없다. 학교폭력 사건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 학교나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이나 보호자에게 사건에 관한 통보와 함께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쟁당사자가 구두로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분쟁조정신청서의 작성을 안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기한

### 가. 분쟁조정 개시일

(1) 학교폭력 발생 후, 분쟁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2)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3)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의 연기를 신청하였으나 자치위원회의 판단결과 불가피한 사유로 연기를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분쟁조정기일을 다시 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 나. 분쟁조정 기간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1개월이란 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개별법률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계산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이 적용되며(민법 제155조), 민법에 따르면 주(週), 월(月), 또는 년(年)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한다(제160조 제2항). 1개월 이내 (또는 1개월을 넘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 9월 5

일 분쟁조정을 개시하였다면 10월 4일까지(10월 4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 관할권

가. 피해·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일 경우에는 해당학교 자치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한다.

나. 피해·가해학생이 다른 학교일 경우에는 (1)동일한 시·도 관할 구역일 경우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이 분쟁조정을 하고, (2) 관할구역이 다른 시·도일 경우에는 각 지역의 교육감 간에 협의를 거쳐 분쟁조정을 한다.

## 5. 분쟁조정의 거부 · 중지

가. 분쟁조정의 거부 · 중지 사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①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②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분쟁당사자가 고소 · 고발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이미 개시된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쟁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분쟁조정의 거부 · 중지의 통보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분쟁조정의 거부 · 중지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분쟁조정 시작을 거부하거나 중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분쟁조정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즉, 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했거나 또는 민·형사의 법적절차를 시작한 경우라도 자치위원회는 합의를 하는 것이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보다 서로에게 더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조정에 응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다만, 피해학생 측이 완강히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차후의 학교생활 등을 언급해가며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되고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합의를 하면 교육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해 주겠다”, 혹은 “합의가 이루어

어지는 것을 본 후에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하겠다”는 식으로 징계조치를 담보로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분쟁조정의 신청 내용 중에 명백한 허위사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청 내용의 중요 부분이 사실이고 그 부분에 관해 분쟁 당사자들이 조정을 원하는 경우라면 조정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분쟁조정에 당사자가 참석을 하겠다고 하였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 자치위원회가 참석을 요청하였지만 한쪽 당사자가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단순히 일정상 참여할 수 없어 참여를 거부한 경우라면 일정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에 참석하겠다고 마음먹고 분쟁조정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분쟁조정을 개시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진행되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7. 분쟁조정을 위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조사

가.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나. 조사권한

조사권한은 자치위원회에 있으나 사실상 직접적인 조사는 자치위원회의 지시 하에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교사 즉,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 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고, 의료기관, 청소년상담기관, 수사기관 등의 협조를 얻어 분쟁당사자의 주장내용을 확인한다.

### 라. 조사 결과의 보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 교사들은 조사된 내용을 정리하여 자치위원회에 보고한다.

## 8.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의 결과처리



#### 가. 분쟁조정의 종료 사유

(1)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로부터 1개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 나. 분쟁조정 종료의 통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분쟁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나. 합의서 작성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① 분쟁의 경위, ②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③ 조정의 결과]를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소속 학교 자치위원회와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다. 합의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3) 조정의 결과, (4)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라. 임의적 기재사항

(1) 치료비 지급시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 (2) 학교 자체적으로 분쟁조정결과가 이행되는 지 확인 전화나 요청, (3)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에 별도 화해 기회 제공 등을 기재할 수 있다.

#### 마. 교육감에게 보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바. 분쟁조정의 이행강제의 문제

분쟁조정을 통하여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이는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당사자 일방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치위원회가 나서서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합의금에 대해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집행공증하는 경우에는 약속어음의 만기로부터 3년내에서는 별도의 판결문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9.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가. 제척사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관련이 있다고 자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사건에서 제척된다.

### 나. 기피신청

(1)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자치위원회는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다. 회피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 10. 비밀누설금지 및 회의록 공개의 문제

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1)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은 누설해서는 아니 되는 비밀의 범위에 속한다.

다.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정리하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과 분쟁조정’ 및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나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를 하고자 할 때 즉, 피해학생 측에서 치료비와 요양비 등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및 가해학생 측에서 피해학생 측의 치료비 및 요양비에 대해 합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①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②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분쟁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이미 개시된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쟁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소속 학교 자치위원회와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을 통하여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여도 이는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당사자 일방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치위원회가 나서서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은 없다.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관련이 있다고 자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사건에서 제척된다.